

▶ 14면

▶ 9면

▶ 7면

▶ 11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전자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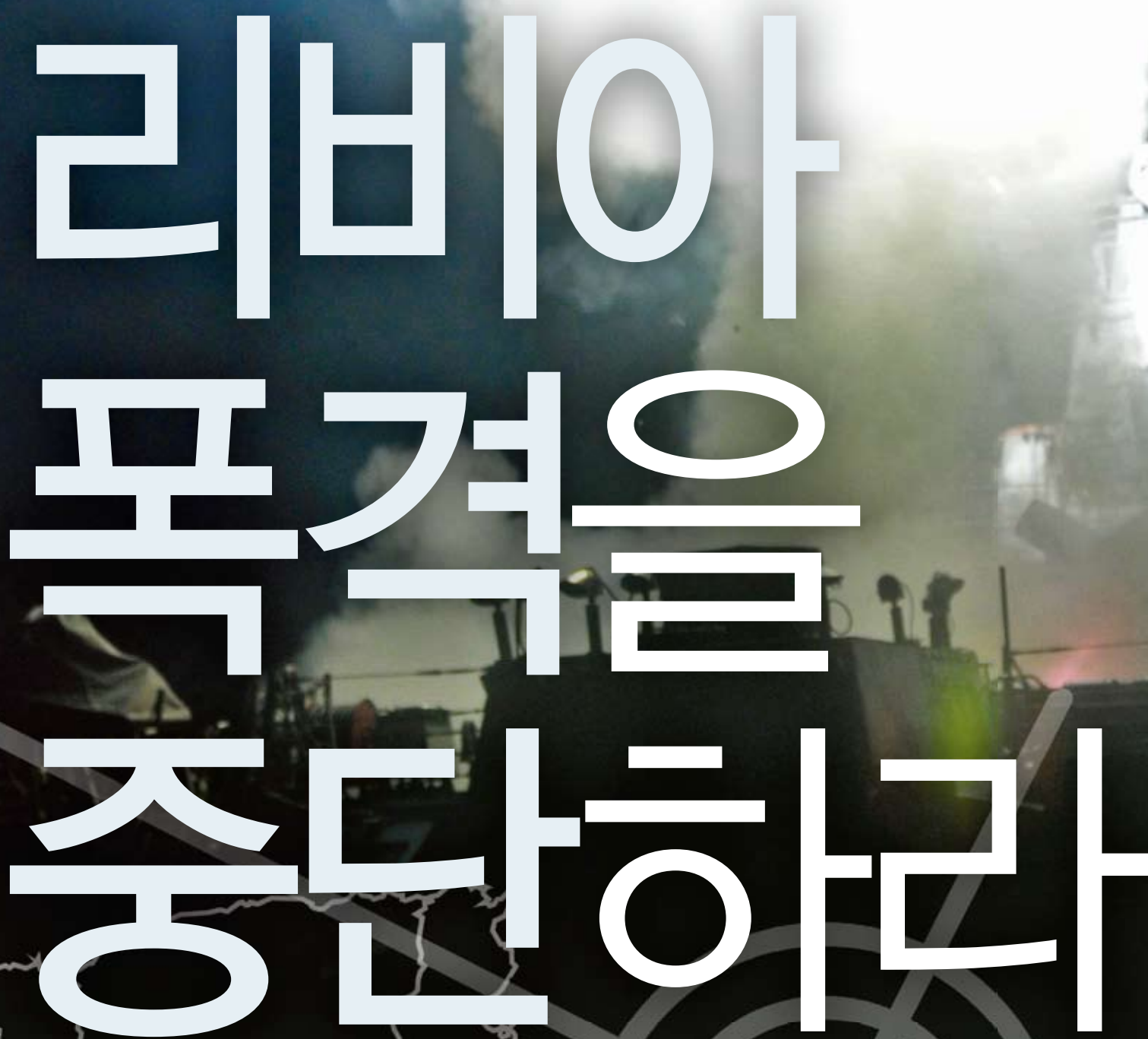
ISSN 2005-8217



Left21.com

제53호 | 2011년 3월 26일 ~ 4월 8일 | 값 1,800원

리포트21



리비아 포격을 중단하라

아랍 혁명에 승리를!

관련 기사
3~6면

사이먼 아사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레바논 사회주의자

서방 열강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이 리비아 혁명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월 17일 시작된 무아마르 카다피에
맞선 항쟁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영
감을 주고 있다.

카다피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시위대를 향해 공중 폭격을 감행하고 사람들을 대량 구속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많은 리비아인이 고통에 빠졌고, 그들은 혹시 서방 개입이 자기 목숨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됐다.

그러나 서방 정부가 보호하려는 이익
은 리비아 혁명의 이익과 어긋난다.

서방 정부는 중립적 세력이 아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한다.

서방 지배계급들은 튀니지의 벤 알리
와 이집트의 무바라크 등 자기 동맹들을
날려버린 이 지역 민중 혁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서방 정부가 정말 독재자에 맞선

민중 혁명을 지지한다면, 왜 그들은 모든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가?

왜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예멘 정부가 민중 운동을 억압하는 것에 도전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가자 지구를 또 공격했다. 그러나 서방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적이 없다.

서방 제국주의의 위선은 너무 명백하다. 서방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은 서방 정부의 동맹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행동하도록 놔 둔다. 벤 알리

와 무바라크는 물러나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방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서방 정부는 아랍연맹의 지지를 근거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아랍연맹은 현 혁명이 몰아내려
는 독재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총성스런 동맹으로 자국 민중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다.

서방 폭격의 실상이 명백히 드러나면
서 이 동맹은 분열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된 첫 날, 아랍연맹 사무총장 아무르 무사는 이렇게 불평했다. “지

금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목표와 어긋나는 것
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민간인 보호지
더 많은 민간인을 폭격의 대상으로 만들
란 것이 아니었다.”

서방 정부의 개입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거나 혁명을 전진시키는 것이 목
표가 아니다.

서방 정부는 과거 자신이 카다피 정부와 맺은 계약을 지키려는 것이다. 서방 정부는 애초부터 리비아 혁명이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 3면으로 계속

사지출처 미해구

세상은 요지경

“가스고 유전이고 우리 땅에는 없지만 남의 땅에 가서라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얻으려고 제가 지금 이 작은 눈으로 세계를 살피고 있어요.”

재앙은 안 보고 이윤만 보는
이명박의 눈

“그래도 원자력은 친환경적”
기획재정부 장관 윤중현,
일본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나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등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반사 이익”
일본 재앙이 기회라는 <중앙일보>

“마스크와 장갑을 사서 끼고 다니면 된다. ... 피부에 닿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옷에 묻은 방사능 물질들은 집으로 들어가 기 전에 툭툭 털면 된다.”

핵에 쿨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은철

“일본 지진은 하나님께서 ‘요격 바라’는 마음으로 흔들었다. ... 보통 나라와 달리 세계에서 제일 교만하고 우상과 귀신이 많은 나라”
조용기 처남 강남교회 목사 김성광

“한국 마크가 들어간 생수를 지원하자. 봉사단이 갈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태극마크를 다는 등 통일했으면 좋겠다.”
도올 생가는 별로 없는 이상득

“작금의 전세난을 보면서 다 죽은 줄 알았던 마르크스의 저주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폭동하는 전 · 월세금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자극하면서 체제에 등을 돌리도록 떠밀고 있는 것”
<조선일보>

“내 환자 중에 건설 노동자 · 공장 노동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들이 많다. ... 공장에서 분당 5천~6천 회로 돌아가던 볼트가 빠져 배에 박히면 간장 · 담도 · 췌장이 다 파열된다. 그거에 비하면 총상은 간단하다.”
석해균 선장을 살린 이국종 의사

“제가 이렇게 자산이 많은 줄 저도 지난 청문회 때 보고 알았다.”
재산이 74억 원대인 최시중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자본주의연구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사진 <레프트21>

3월 29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자본주의연구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수행 교수와 여러 진보단체들이 참가해 마녀사냥 시도를 비판했다.

3월 21일 오전, 보안경찰은 대학생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의 집에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세 명을 체포했다. 이에 항의한 학생 51명도 연행했다.

체포된 세 명 중 두 명은 별다른 혐의가 없어 석방됐다.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주최한 캠프에서 강연한 하종강 · 강신준 교수의 강연록 등을 증거물이랍시고 압수해 갔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전형적인 ‘아님 말고’ 식 수사 행태다.

보안경찰은 이들이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 기”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 자본주의연구회도 그 하부조직이며,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혁명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연구회는 그 동안 회원을 공개 모집하고, 진보적 대중서적들을 읽고, 진보적 연사들을 초청해 ‘대안경제 캠프’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하고자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 온 대학생들이 북한 정부의 폭두각시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때도 “북한의 사주”를 들먹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마치 모두 북한 당국의 지령에 의한 것인 양 모독한 바 있다.

이번에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은 대학 교재로도 쓰이고 대형서점에서도 팔리는

‘칼 마르크스 전집’을 보며 “불온도서”라고 말했다. 결국,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저들에겐 곧 ‘이적 행위’인 것이다.

학생들은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군사독재 시절 발표된 술한 ‘간첩단’ 사건들은 조작과 부풀리기로 점철됐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공안당국이 터뜨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재판부는 단체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체제 비판

그간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 간부들을 표적 수사해 왔다. 촛불시위 이후 진보적 학생운동이 세력을 회복하자 2009년에 경찰은 학생들을 줄줄이 연행했고, 이번엔 체포된 하인준 씨도 당시 촛불시위 참가 혐의로 대공본실에 끌려간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보안경찰은 조세훈 씨 등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의 신상을 몰래 캐려다가 들통난 적이 있다.

경찰당국은 주로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친화적인 견해를 빌미로 ‘이적단체’를 만들고 단속해 왔지만, 국가보안법이 진정 ‘적’으로 여기는 것은 남한 정권과 체제에 비판적인 주장과 활동이었다.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그 법의 체제수호적 본질을 잘 보여 준다.

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남한 정부 관료들과 기업가들은 북한 고위층을 만나 ‘고무 · 찬양’ 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은 북한사람과 접촉했거나 북한 체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은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사건은 4월 재보궐선거와 3월 말과 4월 초에 예정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를 앞두고 터졌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탄압도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진보운동을 위축시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최호현 씨가 고려대 학생운동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이번 탄압은 3월 말에 학생총회를 앞두고 있는 고려대의 진보적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압수수색 직후, 15여 개 단체가 모여 신속하게 탄압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권의 흉악한 의도에 반대하고, 정치 ·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탄압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

최미진

중동 혁명 파괴를 돕고 있는 UAE 파병 한국군

이명박은 원전 수출 협상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3월 12일에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국방 협력의 성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명박이 말한 국익의 실체는 아랍에

미리트(UAE) 정부가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5백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1월 파병된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 군대에 특수전 · 대테러 임무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 군대가 중동에서 반혁명 군대 구실을 하는 아랍에미리트(UAE) 군대를 교

육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포위하는 전진기지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군사 지원해 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군비 투자에 열을 올리는 나라다.

아크부대는 당장 철군해야 한다.

김문성

핵 재앙을 향해

계속 가자는

이명박

이명박의 ‘핵발전 르네상스’ 꿈은 야무지다. 국내 핵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갑절로 늘릴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 수주에 이어 핵발전소를 모두 80기 수출해 세계 신규 핵발전소 시장의 20퍼센트(약 2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세계 3대 핵발전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후쿠시마 재앙이 ‘핵발전 르네상스’ 계획의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1호기가 폭발해 모두가 몸서리치고 있는데도 3월 14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 기공식에 몸소 참가했다.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핵발전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핵발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형 핵발전이 중동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일본 민중에게 다친 핵 재앙을 핵발전 수출 마케팅에 이용했다.

과민 반응

핵발전으로 크게 한몫 잡으려는 자본가들도 “세계 3대 핵발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하기는 마한가지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을 수주한 한전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과 같은 재벌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신문들은 후쿠시마 핵 재앙에 ‘과민반응’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핵발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한국형 핵발전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핵발전 사고들을 은폐해 왔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은폐할 것임을 뜻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핵발전에 반대하는 반핵운동의 목소리도 터져 나와서는 안 된다.

제 나라 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핵 발전을 다른 나라가 사 줄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원자력 산업 진흥과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같은 부서에 맡겨 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지배자들은 후쿠시마 사태 후에도 핵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거대한 투쟁만이 핵 재앙을 끝낼 수 있다.

김재현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다

모금과 방어 캠페인은 계속된다

3월 16일 짐바브웨 판사는 중동 반란에 관한 동영상 봤다는 이유로 반란죄로 기소된 사회주의자 여섯 명을 보석 석방했다.

판사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사의 기소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회주의자 여섯 명은 체포 후 고문당하고, 치료 요청을 거부당하고 독방에 갇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이번 석방은 중요한 일보 전진이다.

국제 연대 캠페인은 로버트 무가베 정부에 압력을 넣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판사는 보석금으로 한 사람당 2천 달러(약 2백30만 원)를 책정했다. 지지자들은 1만 2천 달러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모금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가석방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 피고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일주일에 세 번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원래 경찰은 2월 19일 짐바브웨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모임을 습격해 45명을 연행했다. 모임 참가자들은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 관한 동영상 보고 있었다. 연행된 사람들 중 39명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국의 연대 활동에 감사를 보내오다

남아공의 짐바브웨 사회주의자 지지 활동가들이 한국 활동가들의 지지에 감사를 보내며 3월 21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짐바

브웨 지지 시위에서 한국의 지지 연서를 낭독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한국에서 다함께는 진보정당 대표 등 저명한 진보 인사들의 서명을 조직하고 방어 모금 운동도 해 왔다.

모금 계좌 :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1-04-089255

다함께는 이곳으로 모인 돈을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 = 또 다른 침략 전쟁

이번주 서방의 리비아 개입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미명 아래 프랑스·영국·미국 전투기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말은 서방의 군사 개입이 리비아 민중에게 가할 끔찍한 만행을 감추기 위한 허울 좋은 포장지일 뿐이다.

서방은 특정 나라를 상대로 자기 힘을 과시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해 왔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말은 19세기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 나라 사람들을 ‘문명화’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려고 리비아를 폭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찮은 말인지 생각해 보자.

그간 리비아인들은 카다피 통치 아래 굶주리고 죽음을 당해 왔지만, 서방은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그에게 무기를 수출했다.

리비아 항쟁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많은 리비아인이 억압·빈곤·폭력이 없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은 리비아 민중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민간인 학살과 파괴만 저질렀다.

열망을 이용해 안정적 석유 공급을 확보하고 리비아 자원에 투자해 수십억 달러를 번 서방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

사실,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리비아의 옛 식민 통치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 그들은 전 세계의 자원을 강탈해 왔다.

수단의 사례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잘 보여 준다.

영국과 나중에는 미국 지배자들은 수

단을 수에즈 운하와 중동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 삼았다.

수단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1980년대 수단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한테서 가장 많은 원조

를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지원에는 대가가 따랐다. 아프리카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네 나라는 지금 전쟁과 사회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다.

서방 정부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정당화했다.

서방 개입이 이들 지역에 가져 온 죽음·과괴·분열을 보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이었는지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전쟁의 다른 말일 뿐이다.

다국적 군이 폭격을 시작한 뒤에도 카다피군은 혁명 세력의 근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양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반군은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반군은 서방이 가져온 전쟁과 카다피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서방 전투기의 공습으로 평범한 민간인들이 이미 죽기 시작했다. 서방 개입이 지속될수록 이런 죽음이 더 많아질 것이다.

리비아 민중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그들 자신의 혁명적 운동과 인근의 이집트와 튀니지의 투쟁들에 있다.

서방도 카다피도 아닌 대안은 있다

리비아 항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카다피가 항쟁을 파괴하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다피의 탄압과 서방 폭격 외에 제3의 대안이 있다.

서방 정부는 리비아를 폭격하지 말고 카다피의 동결 자산을 혁명 세력에게 넘겨주면 된다.

이러면 혁명 세력은 무기와 식량, 독재자에 맞서는 데 필요한 기타 필수품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방 정부는 카다피 정부와 맺은 석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리비아 민중과 석유 노동자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고 리비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연자원을 다수의 리비아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곳에서든 압도 다수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대신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다피의 잔인함은 권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지배자들이 얼마나 잔인하



반 카다피 항쟁을 지지하는 이집트 시위대

게 행동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카다피를 물리치고 근본적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집트 혁명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을 벌이며 투쟁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들은 경영진을 몰아냈고 작업장과 자원을 통제했다.

동시에, 주민위원회와 대중 시위는 투쟁을 지속시키는 동력이었다.

이것이 지배자들을 분열시켰고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그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리비아에서도 항쟁이 확산되고 심화하면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개입은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또, 튀니지와 이집트 항쟁이 리비아에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곳에서는 민중이 옛 정권 잔존 세력에 맞서 혁명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는 중요한 원군이 될 수 있다.

이 투쟁들은 이 지역 독재자들을 모두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맑시즘2011

일시 : 7월 21일 (목) - 24일 (일)
장소: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

맑시즘은 11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마다 국내외 활동가와 진보 인사들이 60여 개의 알짜배기 주제로 강연하고, 1천5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학생·청년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청중 토론을 벌입니다.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것이 아랍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시작된 혁명의 제1막,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열한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 연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교수. 1968년 반란으로 각성한 이래 42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헌신해 왔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도 《무너지는 환상》,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길은 없다》,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의 가치 논쟁》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저작이 있다.

▶ 1면에서 계속

리비아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과도국 가위원회는 항쟁 초기에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과도국가위원회는 자신을 인정할 것과 무기와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동결된 카다피 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용병 조종사들에 의한 공격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방 정부는 이들 중 어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며 무기 판매도 거부했다.

오히려, 서방 열강들은 리비아 혁명 세력에 자기 요구를 제시했다.

서방 정부는 미래 리비아 정부가 카다피가 서방과 맺은 모든 계약 - 석유 개발 계약 포함 - 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슬람주의’ 운동을 엄격히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과, 미래 리비아 정부가 아프리카인들의 남유럽 유입을 막는 방파제 건설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서방 정부는 리비아 혁명에 공갈협박을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발칸 전쟁을 통해 탄생한 인도주의적 개입론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다.

서방 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여전히 점령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대중 운동 물결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이제 서방 지배자들은 리비아 개입을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서방 열강이 리비아에서 신속하게 손을 뗀다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리비아를 분단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리비아 혁명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 세력은 서방의 압력에 타협을 강요받고 있다.

자유를 쟁취하고 빈곤과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열망이 여전히 강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야말로 이 지역 민중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논쟁

서방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리비아 공습 이후 벌써 조중동 등 우파 언론들은 ‘카다피 제거를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압박할 선례를 리비아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언론과 진보진영 일부도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두 차례나 사설에서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했다.

〈한겨레〉는 유엔 안보리 결의 후 “국제 사회가 좀더 일찍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유엔 결의안에서 “지상군 투입 문제는 … 사실상 배제됐다.[…] 이는 … 리비아 시민들의 학살과 고통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불평했는데 사실상 지상군 개입을 주장하는 셈이다.

진보신당은 17일 “국제 사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26일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개최 예정인 리비아 군사 개입 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회당은 18일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진보정당들이 반제국주의라는 진보의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제국주의의 논리에 타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지금 다국적군의 목적은 리비아민중의 보호가 아니다.



충격당한 동료를 안고 절규하는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 이것을 묵인·방조한 서방이 카다피의 학살을 막겠다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서방이 내세운 ‘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은 1990년대 냉전 이후 제국주의가 만든 ‘인도주의 개입’ 이데올로기의 변형일 뿐이다.

그것은 국가 주권보다 보편적 인권이 더 우선하므로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 목표를 위해 각국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항해 강제 개입할 수 있는 ‘국제 사회’는 현실에서 서방 강대국들밖에 없다. 결국 이른바 ‘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은 서방 강대국들에게 어느 곳이든 자기 입맛에 따라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허울 좋은 포장지일 뿐이다.

‘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

인도주의 개입의 국제적 첫 사례인 1992년 소말리아부터, 1990년대 내내 이어진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경제봉쇄,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침략전쟁 등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서방의 ‘인

도주의’ 폭탄과 총탄에 희생됐다.

반대로 서방 지배자들은 동맹국의 만행에는 침묵한다. 21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한 일은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지 않는다. 1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군대가 바레인에 진격해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한 일에는 ‘국민 보호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서방 열강은 석유 패권을 유지하고, 중동 혁명의 확산을 막으려고 리비아

국민 보호 책임 원칙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를 국제 사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것.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리비아 사례는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원칙은 사실상 무력 개입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자기 입맛대로 약소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에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다.

카다피가 서방 군대와 정면으로 맞고 공습으로 카다피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서방 열강은 지상군 투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주의의 리비아 점령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인도적 재앙으로 발전할 것이다. 독재정부를 제거했다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생겨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반제국주의의 항쟁’이라는 거짓 선전을 강화하며 오히려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항쟁 세력은 위축되고 분열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리비아 민중의 안전과 해방을 바란다면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해선 안 된다.

카다피의 학살을 막으려는 심정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칼날을 쥐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이 내게 가져다 줄 해방은 무엇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김문성

리비아 항쟁이 서방의 음모?

리비아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리비아 혁명이 승리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방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좌파 인사들 중에는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리비아 군사 개입에 반대하지만 지나치게 음모론에 의존하며, 중동 민중 반란의 의의를 깎아내린다. 그는 심지어 이집트 혁명도 CIA 공작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집트 특사 프랭스 와 이스너가 무바라크에게 사임하지 말라고 권했고, 이것이 무바라크 사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격화시켰고, 결국 무바라크를 사임시키는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그런 음모를 꾸민 것으로 제시되는 증거는? 와이스너의 아버지가 유명한 CIA 스파이였다는 것이다.

초스도프스키는 서방 지도자들이 흘린 악어의 눈물을 근거로 리비아 반란도 서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초스도프스키가 영국 특공대원들이 반란군에 의해 생포된 것을 영국 정부가 리비아 혁명을 배후 조정한 근거로 인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스도프스키 자신이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가 밝히고 있듯이, “리비아 저항 세력의 지도적 인사들은 영국 특수부대의 개입에 크게 화가나 이들을 병영에 가두도록 지시했다.”

사실, 초스도프스키 자신도 “리비아 저항세력이 외국군 개입 문제로 참여하게 분열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항세력 내에서 서방의 제한적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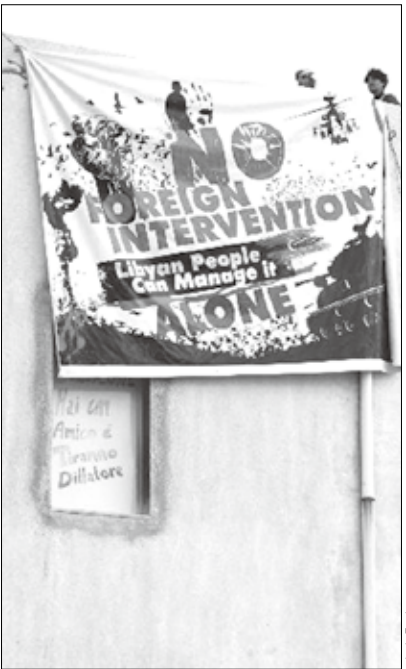


사진 출처: albadharer

반 카다피 저항세력 ‘외세 개입에 반대한다.’

사 개입을 찬성하는 쪽이 발언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지 미리 정해진 음모가 아니었다.

반카다피 세력이 결성한 연합체인 과

도국가위원회는 최초 성명서에서 서방의 모든 군사 개입 반대를 천명했다. 서방 개입을 주장하는 옛 카다피 정권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혁명이 카다피의 반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였다.

한국 좌파 진영에도 비슷한 견해가 있다. 최근에 전태일 노동대학 김승호 대표는 ‘제국주의의 리비아 반혁명 기도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올바르게도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서방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천미 망명자 집단

그러나 김 대표는 더 나아가 리비아 혁명이 전혀 혁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항 세력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으로 카다피를 옹호한다.

김 대표는 “무장봉기를 실행한 것은 청년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모순이게도 “누가 이렇게 무기를 밀수하고 무장봉기를 주도했는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세력이 리비아 구국 민족전선”이라며 천

미 망명자 집단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김승호 대표는 나아가 “카다피가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여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차베스와 함께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카다피를 옹호한다.

그가 “차베스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나라들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2011년은 바로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이기에 서방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왜 서방은 이 정상회의를 막기 위해 군사적 침략까지 감행해야 했을까? “세계 자본주의가 대공황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이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는 매우 담대한 결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 … 이렇게 될 때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현존 제국주의 모두가 후퇴를 요구받을 것이다.”

사실, 카다피가 그런 요구를 하고 싶었다면 굳이 201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토니 블레어, 베를루스코니, 니콜라 사르코지, 버락 오바마를 만났을 때 얘기했으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과 만

났을 때 리비아 석유 자원에 대한 투자를 호소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말을 하기 바빴다.

반대로, 김민웅 교수는 똑같이 서방의 위선을 비판하고 서방 개입을 반대하면서도, 리비아 저항세력을 비판하고 카다피를 옹호하는 뒤통수에 빠지지 않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마저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김민웅 교수의 글은 반갑다.

김민웅 교수는 카다피와 같은 독재자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올바르게 말한다. 그러나 김민웅 교수의 글에는 혼란이 있다.

그는 리비아의 민주화는 리비아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카다피에 반기를 든 무장 반군세력이 리비아를 민주화하려는 세력인지 어떤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김민웅 교수도 좌파 일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비아 혁명에 대한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김용욱

마르크스21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가격 : 16,000원

특집 지금의 이슈들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_ 김하영
금융세계화론 비판 _ 강동훈
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_ 정진희
긴축의 정치학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전략과 전술의 기초 _ 최일봉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_ 김민식
새 상설연대체 - 한국진보연대의 재편(再編)이 될 것인가? _ 최영준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_ 한규한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_ 트로츠키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중동 역사를 피로 물들여 온 제국주의

사이먼 바스케터

중동의 혁명들은 제국주의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것은 지난 1백년 동안 서방 열강의 계획에서 중동 지역 통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강들은 이 지역을 통제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 일부를 점령했다. 그들은 직접 점령하지 않는 지역에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웠다.

영국은 이 지역을 이용해 제국의 범위를 동쪽으로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1882년 이집트를 점령했다.

제1차세계대전 때까지 중동 나머지 지역은 서방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 있었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제국주의 쟁탈전에 뛰어들어 1911년에 오늘날 리비아가 된 지역을 점령했다.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구성하는 지역은 당시 터키에 근거를 둔 오스만 제국의 수중에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은 아랍 지도자들을 설득해 당시 독일과 연합했던 오스만에 맞선 항쟁을 벌이도록 했다. 그 대신에 영국은 이 지역에 독립 아랍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영국 지도자들은 아랍 지도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영국 지도자들은 이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있었다.

이간질

서방 기업들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면서 지역 통치자들에게 쥐꼬리만한 돈을 지불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열강들은 자신의 도둑질과 지배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감추려 했다. 그들은 ‘해방’이나 ‘자치’같은 단어로 자신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려 했다.

프랑스와 영국 관리들은 지배를 쉽게 만들기 위해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서로 이간질시켰다.

1916년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나눠 먹었다. 그들은 지도 위에 선을 그었고,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들은 자를 대고 지도에 선을 그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중동 나라의 국경이 그토록 곧은 것이다!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의 이런 거래는 영국과 프랑스 둘 다 진정한 독립 아랍



이스라엘이 폭격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서방 열강의 중동 지배가 낳은 참상을 보여 준다.

국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제 중동 지역의 석유는 국제 외교를 움직이는 윤활유가 됐다.

이렇게 제국주의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 지도를 작성할 때마다 저항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와 이집트에 친영 왕정을 수립했지만 몇 년 뒤 독립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부족장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들은 나중에 지역 세금 징수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를 자임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를 지지하는 이 부족장들도 1920년 국제연맹이 영국 정부에게 이라크에 대한 신탁통치권을 부여했을 때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영국군은 이라크 항쟁을 가까스로 진압했고 이집트의 시위와 파업을 분쇄했다.

식민지 관료들은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대중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동시에 토착 엘리트들과 동맹을

수립했다.

정당성을 잃은 아랍 지배자들은 오랜 전통이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때마다 점령자들과 협력했다.

1920년대에 이르면, 중동 지역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석유는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상품이 되고 있었다.

1950년대 영국 외무장관 셀윈 로이드는 서방 열강이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무슨 수를 쓰든 이런 유전 지대는 서방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자비하게 개입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세력이 됐다. 미국은 중동을 통제하려고 두 가지 전략을 추구했다.

하나는 아랍 지배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아랍 나라들의 대중적 불만이 폭발해 아랍 지배자들이 서방에 도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거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으로 발전할까 두려워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가말 압둘 나세르가 서방 정부에 도전하자 이런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1979년 이란 혁명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샤를 쫓아냈을 때 그 두려움은 한층 커졌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경비견’ 구실을 하면서 나세르의 도전을 꺾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여전히 미국의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방 열강들은 지배를 유지하려고 이 지역에서 몇 차례 전쟁을 벌였다.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아랍 민족주의자들을 분쇄하려 개입했지만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군은 굴욕을 맛봤다.

그러나 나세르와 다른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혁명의 폭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방 제국주의에 위협이

됐기에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벌였고, 아랍군대를 무찔렀다.

패배한 후 아랍 정권들은 서방 제국주의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친미 독재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거래하고 이스라엘과 타협했다. 그렇게 하길 거부한 정권들은 고립되고 군사 공격을 받았다. 미국이 칭한 “아랍 전선”은 깨졌다. 결국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이 지역 국가들은 친미 독재 국가들로 변신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채택했고, 석유에서 얻은 부가 몇몇 특권 가문 손에 집중되면서 아랍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리고 중동은 여전히 [서방 제국주의에게] ‘역사상 최대의 물질적 선물’이다.

그래서 서방 열강들은 여전히 친서방 국가를 후원하거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개입하는 것이다.

1991년과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미국 제국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 전쟁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줬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석유에 집착한다. 따라서 석유 자원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한다.

올해 혁명이 일어나 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들기 전까지 대다수 중동 나라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강력한 동맹이었다.

아랍 지배계급은 세계 자본주의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몇몇 아랍 독재 정권들은 리비아 개입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을 찬성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은 이미 바레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려고 파병을 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아랍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이 상호 결합되면서 외부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을 막고 진정한 민주적 사회를 성취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방의 리비아 유린 역사

리비아 현대사에도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1911년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쟁탈전’의 일환으로 오늘날 리비아 지역을 점령했다.

1934년 이탈리아는 이 식민지의 공식 명칭을 리비아로 정했고 강력한 폭력을 사용해 통치했다. 이탈리아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리비아를 통치하게 됐다. 리비아는 1951년

친영·친미 이드리스 국왕 아래 독립국이 됐다. 나중에 리비아에서 상당량의 석유 자원이 발견됐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1969년 이드리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그는 미국과 영국군 기지를 폐쇄했고 외국계 석유 회사와 기업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했다.

서방은 카다피를 적으로 봤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6년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전투기를 보냈다. 미군 미사일들은 빗나갔고 트리폴리 주택가를 파괴해 무고한 1백 명을 죽였다.

2년 뒤 여객기 팬암 103호가 로커비에서 폭발해 2백70명이 죽었다. 1991년 걸프전을 앞두고 서방은 리비아를 비난했다.

오랫동안 리비아를 고립시킨 서방 정부들은 2004년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서방 기업들은 이 나라의 석유 자원에 눈

독을 들였다. 2007년 영국 석유 기업 BP는 토니 블레이 전 영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리비아의 국영석유공사와 석유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영국이 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석유량은 66퍼센트 증가했고 리비아에 대한 수출은 50퍼센트 늘었다.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중동 혁명, 환경 문제, 역사 이론, 3가지 주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속 강연

일시: 2011년 5월 22일(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서울(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01

아랍 혁명의 성격과 전망 (11시~12시50분)

제임스 앨린슨 에든버러대학교 강사, 국제정치 전공, 《히스토리컬 메티리얼리즘》지 편집위원, 2008~09년 요르단대학교 연구원을 지냈다.

02

유럽 중심주의 비판 (2시~3시50분)

오언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과 버백 대학 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후기 사회·경제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역사 기술 방법론을 연구한다.

03

경제 성장이 지구를 죽이는가? (4시10분~6시)

개릿 데일 브루넬대학교 부교수(정치학·역사학), 기후정의운동가, 기후변화반대운동가라는 단체의 '백만 기후 일자리 즉각 창출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 발칸 전쟁

피를 부른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

많은 사람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하면서도 리비아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서방 정부들은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고,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성공’한 것은 그런 생각의 올바른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말에 불황이 닥치자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지도자들은 다양한 민족 집단들 사이의 긴장을 부추겨 증가하는 노동자 저항 물결을 잠재우려 했다.

그들은 결국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갔고 유고슬라비아는 몇 개의 소국으로 쪼개졌다. 당시 TV 영상은 “인종 청소”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공격당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방송했다.

나토는 이 민간인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이 개입은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됐다.

1993~1995년 사이 진행된 첫째 단계인 ‘데니 플라이트’ 작전에서는 분쟁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지만, 특히 세르비아 쪽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작전은 전투기 비행을 거의 완전히 중단시켰지만 감시하기 힘든 헬리콥터의 움직임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기간에 딱 한 번 벌어진 공중전에서 미국 전투기는 세르비아 비행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저격수나 박격포 공격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전쟁은 갈수록 격화됐고 희생자 수도 늘었다.

1994년에 이르면, 나토는 작전 목표를 지상군 표적, 특히 고라즈데와 사라예보에서 전투를 벌이던 탱크를 공습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했다.

1999년에 시작된 2단계 개입은 1단계가 끝난 곳에서 시작됐다. 미국과 영국 공군은 코소보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르비아를 78일 동안 공격했다.

이들의 전투기는 9천3백 번 출격해 군사 표적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차, 다리, 벨그라드의 중국 대사관과 TV 방송국도 파괴됐다.

나토는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배를 중단시켰고, 코소보는 유엔 보호령이 됐다.

서방 지도자들은 이것을 비행금지 구역 정책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행금지 구역 정책이 아니었다. 많은 민간인을 죽인 노골적인 제국주의 힘자랑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 합참부지사 조셉 랄스



1999년 나토 공습으로 붕괴된 세르비아의 건물

톤은 이것에 만족했다. 그는 1999년 9월 이렇게 말했다. “떨어뜨린 폭탄의 양에 비교하면 세르비아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아주 적다. 1천5백 명도 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구역은 본격적인 폭격 작전으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지도 못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보호대상인 민간인들을 공격한 점은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힘자랑

한 번은 서방의 공습으로 피난 행렬 속에서 트랙터를 타고 있던 60명이 죽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나토 대변인 쥐세페 마라니 장군이 한 말은 나토가 그리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조종사가 자동차들을 공격했을 때, 그것은 군용 자동차였다. 나중에 그들이 알고 보니 트랙터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다.”

세르비아에서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몰아낸 것은 나토 공습이 아니라 민중 항쟁이었다. 오히려 나토 공격은 코소보에서 알바니아인에 대한 ‘인종 청소’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나토가 그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개입했음에도 말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역 군벌, 독재자와 깡패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작위적으로 건설하고 지원했다. 따라서 차별과 억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나토는 냉전 당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기구다.

냉전은 끝났다. 그러나 나토는 해체되지 않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서방 제국주의 도구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했건, 나토가 유고슬라비아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서방 열강들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던 지역으로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싶었다.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아래 진행된 서방 열강의 군사 공격은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이었다.

그것은 리비아에서 반복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여전히 서방 열강들의 침략 도구다. 그들이 리비아에 개입하려는 것도 석유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사람 잡는 ‘정밀’ 폭격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연일 리비아를 강타했다.

영국 공군은 스톱새도우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전에 표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쏘면 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고정된 표적을 공격하는 데 쓰인다.

전 세계 최대 군수업체 중 하나인 영국의 BAE가 이 무기들을 생산한다. 주류 언론과 정부는 이런 무기들이 매우 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방 정부들이 죽인 민간인 숫자를 세어 보면, 이런 주장이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라크 전쟁 동안 이런 미사일들이

민간인 수천 명을 죽였다. 1991년 2월 13일 미국 스텔스 전폭기가 바그다드의 ‘지하 군사 시설’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곳은 대피소였고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5백 명이 죽었다. 불과 사흘 뒤에 영국 폭격기 공격으로 민간인 1백30명이 죽었다.

리비아에서 사용될 이런 미사일과 폭탄 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다. 이들은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 무기다.

리비아인 수백 명이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미사일에 의해 자기 가족이 죽기를 바라면서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엘아마리에 방공호

유엔 – 살인마들의 모임

많은 이가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한 것을 근거로 서방의 공습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엔은 언제가 열강의 도구였다.

유엔은 제2차세계대전 후 승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만든 기구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단을 정당화했고 콩고의 급진 지도자 파트리스 뭉바를 살해하는 것을 도왔다.

또, 소말리아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 살육과 파괴를 가져 왔다.

유엔 안보리는 비토권을 가진 다섯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로 구성돼 있다.

안보리는 비상임이사국 열 나라를 포함하며, 보통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열강들이 쉽게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유엔을 관통하는 무자비한 힘의 논리를 보면, 열강들이 서로 협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열강과 그 동맹은 엄청난 대학살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와 수많은 다른 나라를 끔찍한 고통에 빠뜨렸지만 유엔은 수수방관했다.

러시아는 헝가리 · 체코슬로바키아 · 아프가니스탄 · 체첸을 침략했지만 유엔은 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유엔을 구성하는 살인마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번역 김용욱 /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팔레스타인 해방과 이집트 노동계급

훗날 어떤 역사가는 2010년 5월 말 이스라엘이 자행한 학살 사건을 이집트 혁명을 재촉하고, 30년간 지속된 무바라크 독재를 붕괴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쓸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팔레스타인을 향하던 국제 구호선을 습격하고 활동가들을 학살한 이스라엘의 만행에 격분한 이집트 민중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카이로에서만 수만 명이 모였다. 이 시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무바라크도 겨냥했다. 그 뒤 몇 달이 안 돼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무바라크는 권좌에서 쫓겨났다.

무바라크의 몰락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미국의 중동 지배전략에서 이집트는 핵심적 지위에 있었다. 미국은 아랍의 맹주인 이집트를 길들이고 친미 독재정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1979년 이래 아랍 민중에게 굴욕을 주고, 그들의 단결을 방해해 온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미래도 위태롭게 됐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협정의 미래가 암울해지자 노심조사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팔레스타인 해방과 이집트 혁명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잔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 온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미국의 지원으로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이스라엘에 대면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진 게 돌맹이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랍 지배자들과 독재정부들은 이스라엘과 공모해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억압하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며 모른 체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행여 자국 민중을 급진화시킬까 두려워했다. 이는 모두 미국 제국

주의 중동 지배전략의 산물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이끌던 민족주의 지도부인 파타와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 왔다. 그리고 얼마 전 폭로된 이른바 ‘팔레스타인 페이퍼’는 파타와 PLO의 전략이 파산했음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그들은 아랍 지배자들에게 호소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루려 했었고,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처’에 의존하려 한다.

반신불구의 국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력에 굴복하고는, 단지 손바닥만한 땅땸기에 세운 반신불구의 국가를 인정받기만을 원하게 됐다. 이 때문에 파타와 PLO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고분고분한 ‘합리적’ 파트너를 자처했다. 그러나 이는 팔레스타인 민중

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고 새 세대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급진화시켰다.

새 세대 팔레스타인인들의 영웅적이고 처절한 인터파다(봉기)는 아랍 민중에게 커다란 영감을 줬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왕정과 독재자들의 억압을 모두 극복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랍에 산재한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나, 강제수용소나 다름없는 서안과 가자의 피폐한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이런 전략을 발전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효과적 전략은 아랍 전체,

특히 이집트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 혁명에 열광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영이다. 그들은 이집트 혁명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발견하려 한다.

아랍의, 특히 이집트의 노동계급만이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랍 지역에서 최대 규모인 이집트 노동계급은 집단적 행동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힘을 가지고 있고 이번 혁명에서도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들은 미국의 중동지배 전략과 아랍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 둘 다를 철폐해야만 진정한 해방될 수 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노동계급은 혁명의 의제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아랍과 이집트에서 연속혁명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규한



캠프데이비드 협정

1979년 이집트가 미국·이스라엘과 타협하면서 맺은 협정. 아랍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협정으로 광범위한 아랍 민중의 지탄을 받았다.

튀니지, 이집트, 예멘...

중동 민중 반란은 계속된다

지난해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은 독재자 두 명을 무너뜨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대중 투쟁 물결로 확산됐다.

지난해 12월 17일 노점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경찰이 야채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자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튀니지 보통 사람들이 쌓아 온 분노와 고통을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튀니지 정부는 23년 동안 집권한 독재 정부였고 많은 사람은 그 정부에 감히 저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곳곳에서 저항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했다.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 세례에 직면해서도 사람들은 ‘우리는 두렵지 않다’를 외치며 거리를 사수했다.

결국 1월 14일 독재자 벤 알리는 망명을 떠났다. 수십 년 만에 중동 독재자가 대중 항쟁으로 쫓겨난 것이었다.

중동 지역 민중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기 정부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계급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친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맞선 대중 투쟁이 벌어졌다. 그는 국가 보안군을 동원해 이 반란을 분쇄하려 했다.

무바라크의 강패들은 시위대를 위협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혁명의 중심지인 타호리르 광장에서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공격에 맞서 싸웠다.

무바라크는 권좌에 남아 있으려 발버둥쳤지만 18일간의 항쟁을 겪은 후 그는 쫓겨났고 전 세계 민중은 기뻐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모두 노동자 투쟁이 중요했다. 이집트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형 시위를 호소했다. 또,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을 벌이자 무바라크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대중 운동이 독재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투쟁 물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했다. 오만,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시위가 벌어졌다. 모로코, 예멘, 알제리, 요르단과 레바논 등 중동



사진 출처 Hossam el-Hamawy

2월 14일 파업을 벌이는 이집트 운송 노동자들 반란은 잠자던 거인인 중동 노동계급을 깨웠다.

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지배자들은 양보 정책으로 불만을 잠재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임금을 올렸고 식량이 상승에 제동을 걸었고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동시에, 그들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서방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런 폭력적 탄압이 가능했다.

잔인한 탄압

서방 군수업체들이 시위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 총알, 탱크와 총을 중동 독재자들에게 팔았다. 서방 정부들은 이런 판매를 승인했다. 무기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서방 정부들은 중동에서 일어난 모든 투쟁에 개입해 왔다. 리비아에서는 이른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명목으로 좀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니콜라 사르코지와 버락 오바마는 자기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리비아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 지역에 대한 서방 열강의 통제를 재확립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 열강들은 자신이 지원한 두 독재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거나 민중이 ‘덜 탄탄한’ 정부와 대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방 정부의 개입 때문에, 리비아 민중은 혁명에서 승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방 개입이 혁명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못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중동 항쟁은 잔인한 탄압으로 몇 차례 후퇴했다. 바레인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군대를 보내 시위대를 공격했다. 지난주 예멘에서 군대는

52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고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곳에서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주 시리아에서 수천 명이 “민중은 뼈에 사무치게 자유를 바란다”고 외쳤다.

3월 19일, 살해된 시위 참가자들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혁명을 요구했다.

지난주 시위대가 학살된 예멘에서는 3월 20일에 수도 사나에서 수만 명이 행진했다.

예멘 대통령은 내각 전체를 해임했고 월요일에는 고위 장군이 반정부 세력으로 넘어갔다.

같은 날 모로코에서는 수천 명이 부패 척결과 시민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에서는 5천 명이 바레인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파병군의 탄압을 받는 바레인인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동에서 지속되는 반란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 준다. 첫째, 평범한 보통 사람, 특히 노동자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례는 국가가 아무리 잘 무장하고 자원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대중 저항을 언제나 억누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둘째, 동시에, 지배자들은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반란은 혁명이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 줬다.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날은 투쟁이 급격히 전진했다가 며칠 뒤에는 급격히 후퇴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이 후퇴할 때도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반란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집트 노동자들이 혁명을 전진시키고 있다

앤 알렉산더

내가 지난주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이 보였다(그것은 잘못된 인상이었다). 카이로 공항에서는 관광객들이 룩소르의 기온과 앞으로 관광 일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다른 패치럼 자동차가 가득했다.

그러나 미움을 받던 독재자 무바라크의 추출에 이어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임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항쟁 당시 주요 길목마다 배치됐던 탱크들은 사라졌다. 내가 탄 택시에는 혁명 열사들을 기리는 플라스틱 표지가 걸려 있었다.

라디오 아나운서는 운전자들이 카이로 순환도로에서 강패들을 만났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알려 줬다. 이 강패들은 카이로의 타호리르 광장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던 자들이다.

1월 25일 무바라크에 맞선 항쟁으로 촉발된 혁명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집트 혁명을 ‘페이스북 혁명’이라고 찬양하는 서방 언론들은 이 점을 이해하

지 못한다. 그러나 반무바라크 항쟁에서 각각의 전환점은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과정을 촉발했다.

첫째 국면은 1월 25일 최초의 시위 다음에 시작했다.

당시 수만 명이 최루탄과 총알에 굴하지 않고 무바라크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보안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려 하자 거리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무바라크 정권은 인터넷과 휴대폰 연결을 끊고 실탄을 지급한 소요 진압 경찰 수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의 수는 계속 늘었다.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불과 며칠 뒤에는 수백만 명이 행진을 했다. 대다수 시위 참가자들은 고학력자나 영어를 구사하는 블로거나 트위터 사용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교사, 사무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와 학생 등 평범한 이집트인들이었다.

거리 시위 물결은 도도하게 진행됐고, 무바라크 정권은 경찰을 철수해 거리 통제권을 시위대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권은 강패들을 동원해 타호리르

광장을 시위대의 손에서 되찾으려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돌로 무장한 채 강패들에 맞서 싸웠다. 강패들을 물리치자 2월 5일과 6일 시위에 참가한 군중의 수는 더 많아졌다.

무바라크에 맞선 항쟁은 이제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됐다. 무슬림과 가톨릭 교도가 독재에 맞선 혁명적 투쟁에서 단결하게 된 것이다.

파업 물결

그러나 항쟁은 여전히 고비에 서 있었다. 1월 28일 경찰은 거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 군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비록 군인들이 총구를 시위대를 향해 돌리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군인들이 친무바라크 강패들이 광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봤다.

2월 8일 거대한 파업 물결이 시작됐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집단적 힘을 사용해 자기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강물에 떨어진 돌이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파업 물결이 이집트 전역을 휩쓸었고 시

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불과 며칠 뒤에 최소한 노동자 30만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제 혁명이 거리에서 작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2월 1일 육군최고평의회는 무바라크를 사임시켰지만 파업은 지속됐다.

또 다른 과정이 파업과 결합됐다. 1974년 포르투갈 혁명 당시 활동가들이 ‘사네아멘투’, 즉, ‘정화’라고 불렀던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작은 무바라크들’을 제거하려는 투쟁이다.

3월 20일 노동자 수백 명이 정부 청사로 통하는 도로를 막고 자기 작업장의 부패한 사장을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은 국가 기구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층 압력 때문에 신임 총리는 대중적 혐오 대상인 무바라크의 보안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육군최고평의회와 장군들은 옛 정권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옛 정권과 연관된 대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물론, 이런 조치 중 일부는 군 지도부를 포함해 아직 남아 있는 옛 정권 인사

와 기구들에 대중의 불만이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다.

그러나 아직 기층 투쟁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지난주 토요일[3월 19일] 수많은 이집트인들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포함해 개정된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참가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혁명적 좌파와 독립 노조 등 다양한 야당 활동가들이 반대 선동을 벌였음에도 이 법안은 77퍼센트 찬성으로 통과됐다.

무슬림형제단이 개헌안을 지지하고 국영 TV가 찬성 여론을 조성한 것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작업장과 빈민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투쟁 물결이 혁명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를 만났다. 10년 넘게 반핵 운동을 벌여 온 그는 현재 35퍼센트에 이르는 한국의 핵 발전 비중을 0퍼센트로 만들기 위한 변화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현재 3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59퍼센트로 늘리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핵발전소는 21기 있습니다. 건설 중인 게 일곱 기, 추가로 건설될 것까지 합하면 열한 기 정도가 더 건설될 겁니다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 연장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가 올해 6월까지 수명 연장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또 올 6월까지 울진, 영덕, 삼척 이 세 군데의 신규 핵발전 부지를 조사해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핵발전소의 밀집도는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당장 가동을 멈춰도 그 전체가 하나의 핵폐기물이 됩니다. 그 중에 방사선이 높은 사용후 핵연료는 처분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단지 장소 문제가 아니라 기술도 없는 상태입니다. 짧게는 10만 년에서 길게는 1백만 년 동안,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고 그동안 생태계에서 격리돼야 하거든요. 지하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인류에게 없습니다.

핵 사고

[한국에서도] 그간 많은 핵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사선 누출과 백색경보가 내렸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1킬로미터 안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고리 핵발전소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다 들어갑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는 그동안 활성단층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양산단층, 읍전단층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단층대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활성단층은 근래 [지반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3월 16일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열린 가동 중단 요구 기자회견. 수명 연장된 후쿠시마 원전이 낳은 재앙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정부

주시는 지질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문제 때문에 [방폐장 공사]가 2년 6개월이나 지연됐고 지금도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방폐장이 완공된 뒤에 방폐장이 물에 둘러싸일 겁니다. 여기에 보관될 방사능 폐기물은 최소한 3백~4백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데 말이죠. 이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그 지역에서 규모 9.0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내진 설계도 그것에 맞춰서 한 거죠.

한국은 진도 6.5가 기준인데요. 하지만 동해안에서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 설계를 높여야 하는 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7.0으로 높이긴 하는데 신규 건설부터 높인다는 거예요. 노후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노후 발전소는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밀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도 계속 핵발전

소가 많이 지어지면 어디선가 한 군데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규 건설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명 연장된 노후 핵발전소의 내부 부품을 다 바꿨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이현석 대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콘 같고 미션 같고 뭐 같고 해도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은 부품이 교체됐다 할지라도 각각의 부품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고 일부 부



품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체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했어요. 그 이후에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14~15퍼센트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현재 35퍼센트인 핵발전 비중을 0퍼센트로 줄이는 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신규 건설을 중단한다는 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핵발전소에 투자된 노력, 그 연구비, 그 홍보비를 재생에너지로 돌릴 수 있거든요. 성과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게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명박을 못 믿는 이유

한반도가 속한 지역은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다. 그러나 제트류를 지칭하는 편서풍은 지상 5킬로미터 높이에서 부는 바람이다. 일본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후쿠시마에서 불과 1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편서풍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바람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지면과 해면 마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압배치에서는 바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충분히 불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매슬링 교수와 동료들은 2001년 4월 초 관측선을 타고서 동해

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후쿠시마보다 더 멀리 떨어진 미야케지마 화산 분출물의 흔적을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했다. 화산 분출물은 이동 과정에서 충분히 희석이 되면 그다지 유해하지 않지만, 방사능은 그렇지 않다. 미량의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다량의 방사선을 짧게 쏘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이라도 실험자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라고 교육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과거 72시간 유입경로를 분석한 논문에서도

5월부터는 서풍 계열 바람이 약해지면서 일본으로부터 기류가 유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이 그렇다면 동해안 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방사능 공포

5월이면 아직 한참 남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누출 우려가 있는 세슘은 반감기(방사능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기간)가 30년이나 된다. 즉 5월 바람을 타고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류는 방사능을 일으키는 원자핵 붕괴를 화학적·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스스로 다 ‘타버릴’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방사능을 중화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이 수십만 년 동안 감수해야 할 위험을 낳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 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이명박의 21일 라디오 연설)는 비과학적 주장을 늘어놓거나, 방사능 공포에 떠는 국민들을 향해 “괴담”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원자력은 아니다》, 헬렌 칼디코트, 양문, 284쪽, 1만 2천 원

핵발전소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일본 핵발전소 폭발로 전 세계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호주 출신의 의사로 세계적인 반핵운동가인 헬렌 칼디코트가 쓴 《원자력은 아니다》는 핵발전소의 운영방식, 핵 처리와 방사능, 방사성 폐기물, 핵 사고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 준다.

첫째, 일본의 핵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저자는 원자로 노심융해 사고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와 기계적 오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지진이 주는 충격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의미한다.” 핵 재앙이 일어

날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지가 문제다.

둘째,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핵폐기물, 특히 핵 사고는 자연환경과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남긴다.

이번 핵 사고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체르노빌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체르노빌 사고 후 18년이 지났지만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유럽 일부지역의 토양 상층부에는 세슘137의 70~90퍼센트, 스트론튬의 40~60퍼센트, 플루토늄과 그것의 알파 방출체 계열 원소들의 95퍼센트까지 남아 있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은 직접적으로든, 방사

능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든, 백혈병과 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

셋째, 각국 정부가 핵발전소를 고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저자는 핵무기와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플루토늄인데, 이것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봉 내에 다른 유독한 방사성 물질과 혼합돼 있다.

기형아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그 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민간용 플루토늄을 바쁘게 추출해 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과 공장만 구비된다면 핵발전소는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자는 환경과 건강상의 비용 등 ‘외재된’ 위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인(비용-편익)면에서도 핵발전소가 값싼 에너지가 아님을 조목조목 밝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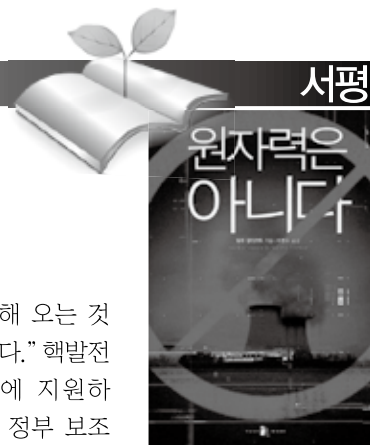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헬렌 칼디코트는 핵발전소를 폐쇄해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자력산업을 소생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10억 달러는 값싼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의 기회비용을 도둑

질해 오는 것이다.” 핵발전소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다면 태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는 경제적으로도 현실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일본 핵발전소 사고로 말미암은 일본 서민과 노동자의 희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핵발전소 전면 반대’라는 정치적 결단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민정 조선대학교 사회학 강사



투쟁 끝에 복직한 김윤주 교사

“소나기를 피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2008년 말 일제고사 반대 활동으로 해임됐던 서울 지역 교사 일곱 명(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송용은, 윤여강, 정상용, 최혜원)이 3월 16일 전원 복직됐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3월 10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마저 기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복직된 교사들은 해직 기간 받지 못한 월급을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 받게 된다. 정부에 맞선 끈질긴 투쟁 끝에 통쾌하게 승리한 김윤주 교사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2008년 10월에 저는 정부가 초등학교생을 일제고사로 평가해서 등급을 주려는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부장, 연구부장, 동료교사들에게 얘기했죠.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썼고,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 첫날 난리가 났어요. ‘조중동’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을 취재하고, 교장이 나를 부르고,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왔죠. 교감이 밤늦게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일제고사를 안 보면 큰일난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해임되자 경찰 병력이 교문 앞을 지켰고,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 갔을 때 장학사와 경찰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했고, 아이들은 통곡을 했죠.

국가 수준의 일제고사를 도입해서 아이들을 줄세우기 하더니 이제는 그것에 반대하는 교사까지 자른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해임되고 출근투쟁을 했는데, 진보정당, 다함께 등 진보적 시민·사회·교육단체 들의 연대가 눈물겹게 고마웠죠. 아침 일찍 나와서 함께 땀말을 들었고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광화문에 가서 서명을 받아 왔고, 나를 위로해 줬어요.

‘나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사자’로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책임감이

생겼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집회에서 발언도 많이 했고,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추운 날 1백 일 동안 농성도 했죠.

정부는 교육을 수치화해 서열화하고 학교·교사·학생 모두 등급에 따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심신을 말살하고 경쟁 체제를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원하는 문제에 정



답을 써 넣는 것으로 공부와 학력을 공증받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죠. 친구들과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시험에 나올까?’만 생각하게 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최고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아이들의 능력은 도외시되는 거죠. 학생인권도 경쟁교육 때문에



끈질긴 투쟁 끝에 승리한 해직 교사들 맨 오른쪽이 김윤주 교사

크게 침해당합니다. 어떤 학교가 ‘똥통 학교’라면 그 학교에 다니는 것 만으로도 아이의 인권은 바락인 겁니다.

일제고사 반대 투쟁은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어요.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죠. 진보교육감은 경쟁교육에 구멍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들마다 문제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노현 교육감은 일제고사 폐지에는 수세적인데 조중동이 주시하고 있다는 부담감이 크겠지만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교조가 전선을 바깥에서 쳐줘야지, 교육감도 ‘이렇게 요구가 많다’고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 수월하겠죠. ‘소나기는 피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나기를 맞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교육감도 당선했고 우리도 승리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자들도 학교로 돌아갔고, 진보교육감도 당선했으니,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하거나 ‘진보교육감에게 부담주지 말자’ 하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현명한 싸움을 하겠다’는 지도부가 당선했어요. 그러나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후보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죠. 전교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실천 의지를 복돋우고 최대한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지금은 싸워볼 만합니다. 진보교육감이 여섯 명이나 되고, 이명박은 레임덕이죠. 전교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건재합니다. 조중동이 뭐라고 해도 전교조는 전교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인숙

대학생 학자금 부채 탕감과 학비 지원 요구가 필요하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하 서울대련)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중 하나로 ‘서울시 학자금 이자 조례 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고, 서울대련은 “이러한 국면을 잘 활용해 서울시의회 통과를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부할 수 없는 여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빌린 학자금에 이자까지 붙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학자금 이자 지원 정도로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2위로 비싸다. 지난해 말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만 5천 명이 넘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은 고등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더욱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올해 다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대학에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이자 지원 정도가 아니라 대학생 부채를 탕감하고,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급진적 요구를 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선 국가가 등록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대출이 아니라 학비 보조금’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싸우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전투적인 운동을 벌이는 게 필요하다.

성지현

반자본주의 연재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⑥ 왜 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가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게 해 줄 것이다.” 아담 스미스부터 오늘날 신자유주의자에 이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전 계급 사회와 다르게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겨우 1백 년도 못 되는 기간에 과거의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해 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생산력 발전과 동시에 착취와 빈곤,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낳는다.

이미 1980년대에 세계 인구의 두 배를 거뜬히 먹여 살릴 만큼 생산력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빈곤 때문에 열 살 미만 어린이가 5초에 한 명씩 죽어 가는 것이 시장경제다.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설사병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최근 일본 핵 참사도 자유 시장의 패해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사기업인 도쿄전력은 이윤 논리 때문에 위험을 축소 발표했고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해 재앙이 막대하게 커졌다.

2009년 세계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의 신화와 효율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때문에 장하준 교수처럼 자유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애초에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주의에서도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 두고 있지는 않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 경제 활동을 한다. … 오늘날 국제 무역량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초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다.

나이가 장하준 교수는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처럼 많은 국가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을 통해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확산한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빈곤은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신화에 일부 흠집을 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는 시장의 효율성 신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윤 동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이고, “시장은 무수한 경제 주체들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경제 행위들을 상호 조율하는 데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다.

물론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낳는 비효율과 낭비는 이윤을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에서 비롯한다. 부분적으로 규제를 한다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이윤 경쟁 때문에 기업들은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느라 중복해서 투자한다.

무선 인터넷망을 보더라도, 인터넷망은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기업끼리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여러 회사가 중복해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 판촉, 금융투기, 부동산 투기, 군비 지출 등에 엄청난 돈이 든다.

비생산 부문

이런 비생산적인 부문은 점점 늘어, 사이먼 모훈이라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미국에서 이런 비생산적 부문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4년에는 35퍼센트였지만 2000년에는 50퍼센트로 증가했다고 계산했다.

생산적인 부문에서도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다 보니 낭비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CT, MRI 촬영이 이뤄지고, 심지어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척추수술 건수가 일본의 일곱 배에 이를 정도로 과잉진

료가 심하다.

이윤을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하다 보니 과잉생산도 항상 벌어진다. 팔려나가지 않아 버려지는 물건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공존한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을 끊임없이 반복해, 발달한 생산력을 끊임없이 파괴해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윤을 위한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가 없으면 발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발전이 이윤 경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아인슈타인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열정적 감각”이 자신이 연구하는 동기라고 말했다. 다윈도 수년간 연구해 진화론을 발전시켰지만 이를 전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해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낸 사례도 세계적인 협력의 결과였다. 가장 신뢰할 만한 보고를 내놓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백30여 나라에서 2천5백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만들었다.

끔찍한 학살 전쟁과 갈수록 커지는 환경 재앙처럼 자본주의가 낳는 비효율과 낭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정선영

쌍용차

공기업화를 향한
끈질긴 투쟁 건설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 기업 마힌드라가 쌍용차 인수 절차를 끝내고 신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외형상 쌍용차가 정상화 된 듯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법정관리 기간 동안 쌍용차의 주인이었던 정부는 무급 휴직자를 1년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노사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오히려 경찰과 회사 측, 심지어 보험 회사까지 가세해 노동자들에게 8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압류를 퍼부었고, 해고의 충격과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 들이 벌써 14명에 달한다.

노동자 쥐어짜기로 일관하기는 마힌드라도 마찬가지다. 법정관리인이었다가 사장으로 재신임된 이유일은 복직 약속 이행은 고사하고,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직원(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은 없”으며, 무급 휴직자의 복직 시기도 특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22일 시민사회 단체들은 “쌍용차 해고자의 잇따른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기업화로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2009년 파업 당시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쟁에서도 중요하다.

쌍용차의 새 주인 마힌드라가 2천4백억 원의 투자 계획을 냈지만, 이는 신규 투자가 아니라 쌍용차가 자체 조달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비판이 나온다. 2005년 상하이차가 쌍용차 인수 후 투자를 축소하고 기술만 취득한 채 회사를 부도 위기로 내몬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게다가 이 투쟁은 해고자들만의 과제도 아니다.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작업 강도 강화에 따른 고통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장기적으로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 보장 요구를 내걸고 끈질기게 공장 안팎의 연대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정종남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임단투와 비정규직 투쟁을 결합해야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울산·아산 공장에선 80여 명이 해고됐고 정직자도 무려 6백여 명에 이른다. 사측은 징계자들의 공장 출입을 차단했고, “노조 탈퇴하면 지금보다 편한 자리 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2공장 비정규직 현장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의 의도는 노조 무력화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 각서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탄압에 맞서 조직을 추스르며 새로운 지도부 건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규직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가 거부한 합의안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경훈 지부장은 4월부터 시작될 정규직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와 비정규직 투쟁을 분리시키려 한다. 이런 계획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사측일 것이다.

정규직 지도부의 비정규직 투쟁 외면은 ‘정규직 이기주의’ 비난을 자초하고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냉소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과 단협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진기 제공 현대차 비정규직지부

3월 18일 출근 홍보전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추스르며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지회는 이런 이경훈 지도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출근 홍보전과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며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강성희 전주 비정규직지회장도 교섭에 더 미련을 두지 말고 징계 등에 맞선 항의를 조직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

반갑게도 지금 울산 1공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점거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1공장 정규직 활동가들은 신차 투입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 노동 강도 강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해고와 탄압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면서, 4월 중

순에 열릴 정규직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방안을 제기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경훈 지부장이 비정규직지회에 부당한 협의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정규직 임단투와 비정규직 투쟁을 결합하자고 제기해야 한다.

최근 한 비정규직 노동자도 언론 기고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현대차 [사측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을 무력화하고, 정규직 노조의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 4월 [정규직]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김기선

전북 버스 파업

“대체 버스 투입 저지가 투쟁의 관건”

최근 한국노총 지도부가 우려스럽게도 전북 버스 사측을 편들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3월 19일 상근 간부 5천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폭력적으로 운영을 방해했다”며 파업 반대 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날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는 파업의 정당성을 왜곡하고 흠집 내는 집회였고, 대체 버스 운영을 보장하라는 파업 파괴 집회였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분명한 비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 전체에게 이롭다. 쥐꼬리만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버스 사업주

들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체 버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이 버스 운전자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3일간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사고를 냈다. 전주시와 사측이 주도한 대체 버스 투입이 비극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파업 대오 내에서는 투쟁 전술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파업 지도부의 다수는 ‘파업 대오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며 대체 버스 투입을 막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체 인력을 사진 채증해 고발하는 식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대체 버스 투입을 막는 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파업 초반에 40퍼센트에 머물던 버스 운행률이 경찰의 차량 탈취 이후 80~90퍼센트까지 늘어나,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투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장기 투쟁으로 생계 문제가 커지면서,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 대체 인력을 실질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역 단체들도 ‘불법 대체 인력 감시단’ 같은 기구를 구성해 대체 버스 투입 저지에 함께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책임 있게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병무

전교조

전교조는
윤희찬 교사
생계비를 지원해야

전교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 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해 왔던 해고자 생계비 지원 연한을 만장일치로 없앴다. 투쟁하다 피해 입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되살린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학민주화 운동의 분출을 이끌었던 상문고(영화 <두사부일체>의 모티브가 된 비리 사학) 투쟁에서 해직된 윤희찬 선생님이 여전히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은 2001년에 해직된 이후에도 인권학원, 정의여중고 등 비리 사학의 민주화 투쟁에 적극 동참했다.

윤희찬 선생님은 해고자 생계비 지원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2006년 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 등을 하며 꾸준히 활동해 오셨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안전 취지를 반영한다면 이 분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주는 노동자의 투쟁에 이런 저런 불법 딱지를 붙이고 해고 위협을 한다.

탄압을 두려워하는 노동조합은 투쟁을 조직할 수가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다.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해고를 쉽게 각오하는 풍토를 막기 위해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고된 조합원 생계비 지원 연한을 없애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의원들이 진정한 투쟁의 대의를 대변한다.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도 투쟁을 결의하려는 사람이 있는 노동조합이 훌륭하고 강력한 노동조합 아니겠는가.

전교조는 2월 대의원대회의 취지에 맞게 윤희찬 교사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김성보 전교조 대의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핵 에너지의 신화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3월 30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410호 (2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 - '인도주의적' 개입, 누구에게 이득인가?

연사: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계간 <마르크스21> 공동편집자)
일시: 4월 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기톨릭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마르크스의 생태학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4월 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제국주의란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연사: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일시: 4월 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8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2-416-0963, 010-2401-1987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부산
왜 21세기에도 기아와 빈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일시: 3월 30일 (수)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사회관 304호
문의: 010-5331-1968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
이집트와 중동의 혁명

연사: 이수현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위원,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 역자)
일시: 4월 5일 (화) 오후 7시
장소: 국민대학교 공학관 별관 B201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4월 4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한국외대 복수전공 논란

양 캠퍼스 학생들의 단결을 도모해야

지난해 말부터 한국외국어 대학교(이하 외대)에서는 서울과 용인 양 캠퍼스 간 전과제도와 복수전공제도가 논란이 돼 왔다. 복수전공제도는 외대의 독특한 학사제도 중 하나로, 용인캠퍼스 학생이 여덟 학기를 이수하고 서울캠퍼스에서 두 학기를 다니면 서울캠퍼스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이른바 ‘4+1’제도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경영대학 학생회 등은 특히 복수전공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서울과 용인 캠퍼스 간 차별을 해소하려 노력하기보다는, ‘1년만 더 다니면 서울 캠퍼스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용인캠퍼스 입

학 경쟁률을 높이고 1년치 등록금을 더 걷는 ‘학위 장사’에만 골몰하고 있다. 복수전공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교수충원과 강의실 확충 등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측에 양 캠퍼스 간 차별 폐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과 용인 학생들이 단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복수전공제도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오히려 서울과 용인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있다. 해마다 용인캠퍼스 학생들 2~3백여 명이 복수전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학

벌 세탁’ 운운하며 복수전공제도 폐지나 축소를 요구한다면, 이 학생들을 내치는 것이지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설움과 한을 안겨 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다함께’ 외대 모임은 지난주부터 총학생회의 복수전공 반대 주장을 비판하는 독자적 선동을 시작했다. 여러 학생회 회의기구에서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다함께는 양 캠퍼스 학생들 간 차별에 반대하고 단결을 바탕으로 투쟁하는 것이 전체 학생들의 권익 향상에 이롭고 학벌 사회에 진정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애초 총학생회가 토

론 없이 복수전공제도 반대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또한, 총학생회와 경영대, 상경대 학생회장 등 소수 강경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다함께’ 외대 모임은 학위 장사에만 몰두하는 학교 당국과 온갖 학벌주의적 논리로 복수전공제도를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에 맞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진보적 학생들이라면 응당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재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학생

이윤 논리와 병원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문제

나는 대학병원과 수술전문 정형외과 응급실에서 수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병원 안에서도 이윤 논리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과 함께 방사선 촬영실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다.

간호사와 방사선과 직원들은 다급하게 검사와 처치를 준비하다 보면 방사능 피폭 방지용 납가운(납으로 만든 앞치마인데, 몸의 측면과 뒷면의 방사선은

막을 수 없다. 무거워서 작업 활동량이 많거나 급할 때에는 착용을 안 하기도 한다)을 입을 시간도 마땅치 않다. 야간에는 방사선과 직원을 한 명만 배치해 간호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도와야 한다.

개인별 피폭량을 측정하는 핀 형태의 기구가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 방사선과 직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일정 피폭량을 넘으면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체할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핀을 빼놓고 근무하기도 한다. 사용자와 중

간관리자도 기구 미착용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

수술방에서만 15년을 근무한 같은 병원의 수간호사는 수년 동안 노력해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 수간호사는 본인이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씨암(C-arm)때문이라고 했다. 씨암은 골절된 부위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기계로 골절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지만,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다.

간호사는 유산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다. 그 원인에는 3교대

근무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방사선 피폭도 위험요소가 될 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피폭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와 환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피폭량 측정 기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피폭량이 일정 수준에 임박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는 필수다.

김지현

민주적 제국주의 = 채식주의 호랑이

민주적 제국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다. 자본의 경쟁·축적 논리는 약육강식이다. 국가들은 자기 영토 안에서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며, 동시에 다른 국가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자신과 사적자본의 이해를 보호·확장하려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가 민주적일 수 있다면, 호랑이도 채식을 할 수 있다.

영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 식민지인들이 ‘근대 민주주의를 도입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은 ‘불건적 사회질서와 중국의 간섭에서 조선인을 해방시킨다’며 조선반도를 침략했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며 중국을 침공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네이팜탄 같은 무차별 살상무기를 동원했다. 발칸반도,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에선 ‘폭압적인 지역 독재자를 제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수백만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름다운 도나우 강’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다.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2003년 3월 전쟁 이래 이라크에서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5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의 군사 개입에 의한 독재자 제거와 ‘자유민주주의 도입’이 더 적은 죽음이 아니라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유, 민주주의, 민족자결, 평화, 공동 번영, 인권은 제국주의 간섭의 핑계일 뿐이다.

유정

부산대 행정학과 학생들의 작지만 통쾌한 승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와 한 교수는 매년 자신의 수업에서 학점 이수 조건으로 PSAT(공직적격성평가)과 토익 응시를 걸었다. 이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F를 받는 학생들도 많았다. 심지어 과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데도 이 시험들의 점수를 잘 받으면 학점을 올려 줘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

몇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교수는

항의한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더는 참지 못한 학생들은 1월에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방학 중임에도 80명이나 모였고,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행정학과 학생들은 이수조건이 명시된 11개 과목 담당교수에 대한 항의를 학교본부에 직접 전달했다.

본부는 일단 네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과목의 이수조건을 폐지했다. 하지만 남은 네 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의 재량이라며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본부에 항의했다. 결국 교수는 해당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라며 모든 과목의 이수조건을 철회했다. 통쾌하게 이긴 것이다.



부산대학교 법인화 반대 행동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당국도 법인화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총장은 1백여 명이 듣는 수업에서 법인화 진행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법인화는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등록금은 오르고 ‘돈이 되지 않는’ 학과는 통폐합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인화는 국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립대 등록금이 오르면 사립대도 등록금을 부담 없이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교육비 인상으로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부산대 당국의 법인화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크다. 부산대 학보인 <부대신문> 보도를 보면, 교수회가 교원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87.1퍼센트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성균관대학교 등록금 투쟁

성균관대학교 당국은 지난 1월 말 학부 3퍼센트, 대학원 4.2퍼센트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성균관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곱절에 이른다.

국문과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4백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합의해 버렸다.

그럼에도 다함께 회원인 나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모아 개강 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 5일간 학생들 1천1백79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16일에는 일부 학생회와 동아리 등 7개 단위 공동주최로 학교 본부 건물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

부산대 총학생회와 학생 단체들도 학생들에게 법인화 반대 선동을 하고 있다. 각 학과 간담회를 조직하고 국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와 함께 10만 인 청원운동도 조직하고 있다(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가 이 청원을 민주당을 통해 제출하는 것은 아쉽지만 말이다). 4월 5일에는 법인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5월에는 서울에서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의 주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많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고 법인화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부산대의 광범한 법인화 반대 분위기는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 4월 5일에 있을 법인화 반대 집회에 적극 동참하자.

박준희 부산대학교 학생

국민대학교 등록금 인상 반대 활동

올해 국민대학교 당국은 등록금과 입학금을 약 2.5퍼센트 인상했다.

총학생회는 아쉽게도 등록금 인상을 합의했지만, 학내 진보적 동아리들과 ‘다함께’ 국민대 모임은 ‘고공 행진 등록금에 어퍼컷을’(약칭 ‘고등어’) 실천단을 결성해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약 열흘간 캠페인을 한 결과 1천6백여 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에 참가했다. 10명이 채 안되는 활동가들이 시작한 일 치고는 대단한 결과였다. 서명운동 결과에 고무된 활동가들은 3월 15일 ‘등록금 인상 반대! 국민인 교육권리찾기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학내 집회였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잔뜩 긴장해 사전에 불허를 통보하는 등 집회를 탄압했지만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학교 당국은 총장실로 서명을 전달하러 가는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끈질기게 총장 면담을 요구했고, 학교 당국은 총장 면담에 나설지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5일까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등어 실천단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권용석 다함께 국민대 모임

대학 미화 노동자 투쟁

전면 파업·점거 농성을 확대하자

박설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쓰고 닦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1백만 원 이상은 줘야죠.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 힘들 거예요. 이를 악 물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여대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3월 23일 전면 파업과 본관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 당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시급 5천1백80원)를 모멸치게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고려대·고려대 병원·연세대 미화 노동자들과 함께 3월 8일 하루 공동 파업을 벌였고, 열흘 넘게 부분 파업과 태업 등을 이어왔다.

세 대학 학생들은 이런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연대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은 낮추고 임금은 올려라’ 하고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공동 집회를 열고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이화여대 학생들도 교육 투쟁 6대 요구로 미화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함시켰고, 연세대 총학생회 등은 학생 1백50여 명을 동원해 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병원지부, 대학노조 고려대지부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학 당국들은 이런 저항에 직면해 “학교는 당사자가 아니다” 하고 발뺌하기 바쁘다. 연세대 총무과는 노조가 부 착한 대자보를 떼어내다가 발각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제 손으로 다시 대자보를 붙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당국들은 십사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 대학 측은 모두 ‘시급 4천4백50원 이상은 못 준다’며 버티고 있다.

물론, 최근 개별 용역업체들이 잇따라 노조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용역업체들이 아니라 원청인 대학 당국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시급 4천4백50원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화여대 용역업체 동서기연 측은 ‘우리는 학교 총무처가 시킨 대로 할 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 당국들이 이처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에 관해 공공노조 서경지부(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간부는 “시급 4천4백50원을 컨트롤 하고 있는 자는 바로 정부다. [정부와 재계도] 우리 투쟁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실제로 미화 노동자 투쟁은 세 대학을 넘어 정부·재계와의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재계는 이 투쟁의 승리가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와 맞물려 더 큰 투쟁을 자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저들은 이번 투쟁의 결과가 4월부터 열리는 ‘2012년 최저임금 협상’에



3월 23일 전면 파업을 시작한 이화여대 미화·경비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계속하자”고 결의했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경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임금 인상률도 정부·재계의 관심사다. 만약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이 5천1백80원으로 오르면, 임금 인상률은 고려대·연세대 26퍼센트, 이화여대 23.3퍼센트가 된다. 미화 노동자들이 두

자리수 이상의 높은 임금 인상률을 따낸다면, 그것이 전반적인 임금 인상 투쟁을 고무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 당국들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보다 3퍼센트 높고(경총은 임금 인상률을 3.5퍼센트 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고대·연대 8.3퍼센트, 이화여대 5.95퍼센트 높은 시급 4천4백50원을 고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학 당국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교섭력’에만 의지해선 요구를 쟁취할 수 없는 이유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는 ‘교섭 가능성’에 치중하며 투쟁 수위를 조절하고 임금 인상 요구액을 자주 낮추지 말고, 전면 파업과 점거 농성을 확대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총도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투”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연대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드디어 이화여대에서 전면 파업과 점거 농성이 시작됐다. ‘3월 15일부터 세 대학 모두에서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던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계획에 비춰 보면, 발동이 늦게 걸린 셈이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는 지난 열흘 넘게 부분 파업과 태업으로 투쟁 수위를 낮췄고, 이것은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일부 학생 활동가들도 더 강력히 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공공노조 서경지부 간부들도 “세 대학 모두 자기 대학에서 점거 농성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이화여대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은 옳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 투쟁이 더 전진하고 승리하려면 몇 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대학 당국을 넘어선 정부·재계와의 싸움이라는 이 투쟁의 성격에 결맞

게 민주노총·공공노조·진보정당·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강력한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투쟁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싸움의 상대, 즉 원청인 대학 당국을 비켜가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가 진보진영에 폭넓게 적극적으로 연대를 호소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노동운동 상층 지도부가 연대 조직 책임을 회피할 핑계가 되고 있다.

둘째, 이화여대에서 시작한 전면 파업과 점거 농성을 고려대·연세대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 당국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쪽에서도 공동 파업·점거 농성으로 단결해야 한다. ‘우리만 임금을 높일 수는 없다. 다른 대학에서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한 이화여대 총무

부처장의 말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가 ‘공동 교섭·공동 파업’이라는 애초의 원칙에서 벗어나 개별 교섭과 투쟁으로 비켜가면서 투쟁의 힘과 기운이 커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는 세 대학 모두 점거파업을 하자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지부 역량이 안 된다”고 답하고 있지만, 연대를 확대하면 실무 지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동국대·홍익대에서 지속적인 점거 농성이 투쟁의 초점을 형성하고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화여대에서도 (출퇴근 방식으로 농성장을 비우지 말고) 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연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려대·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을 결합해 학교 당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학생의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연대는 미화 노동자 투쟁의 큰 자산이다. 학생들은 대책기구를 구성해 밤낮으로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당국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학생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학생대책위원회는 대학 당국의 파업 비난을 반박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도배했다. 결국 이화여대 측은 자신의 입장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내려야만 했다. 이런 통쾌한 소식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다함께’ 연세대 회원들이 ‘등록금이 동결돼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논리를 반박하며 파업을 지지하는 신문을 판매한 것도 이런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 점에서 미화 노동자 투쟁 지원에 헌신적인 연세대 동아리 ‘살맛’이 이런 신문 판매를 제지하려 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일부 사람들은 ‘투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 아니다’ 하고 여기는 듯하지만,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적으로 연대하려는 시도는 투쟁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이화여대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데에는 학생들의 구실이 중요했다. 이화여대 학생대책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간부는 처음에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제기에 자극받은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모일 것”이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이 등록금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을 결합하자고 제안해 성사된 3월 16일 노동자·학생 공동 집회도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학교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 ‘학생 행진’ 활동가가 “지금은 교섭에 집중할 때”라거나 “세 곳 동시 점거는 역량상 어렵다”며 사실상 공공노조 서경지부 지도부를 추수한 것은 아쉽다.

지금 ‘다함께’ 등의 학생들은 전면 파업과 점거 농성을 세 대학 모두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투쟁 승리에 효과적인 전술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동자·학생 들은 이런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



미화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고려대 학생들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은 올려라

고려대에서 미화 노동자들은 생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

두 투쟁은 싸움의 상대가 같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라도 긴밀하게 결합돼야 한다. 미화 노동자와 학생이 힘을 합치면 힘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고려대 당국의 대응 논리를 반박하는 데도 연대가 필요하다. 고려대 당국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렵다” 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형적인 이간질 시도였다.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의 불편을 핑계대

는 등분열 시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임금 인상과 등록금 인하 요구가 상충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려대 당국의 탐욕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두 요구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등록금 인상에 따른 고통은 바로 노동자·민중의 문제다. 등록금 인상이 주는 부담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저지가 노동자 계급에게도 이득이다.

그래서 ‘다함께’ 고려대 모임은 두 투쟁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제안으로 등록금 인하 등을 위해 열리는 3월 31일 비상학생총회 요구에도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가 포함됐다.

3월 16일에 두 쟁점을 결합해 노동자·학생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일찌감치 본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화 노동자들은 학생회 깃발을 들고 행진해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고 열렬히 환호했는데, 노동자·학생 연대가 서로의 사기를 높인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순간이었다.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한다면, 학생들도 더욱 자신감을 얻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

화 노동자들도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고려대 미화 노동자들 상당수가 3월 31일 비상학생총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고려대 총학생회가 미화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 건설에 애쓰지 않고, 등록금 투쟁과 미화 노동자 투쟁을 결합하는 것에서도 덜 적극적인 것은 아쉬운 일이다.

등록금을 내리고 미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두 투쟁의 연대야말로 고려대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김영익 다함께 고려대 모임

우석균 칼럼

‘히로시마가 있는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중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는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가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원료(MOX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플루토늄은 핵무기 연료다. 이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었고, 발전소용으로도 쓸 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줬다. 일본은 이미 잠재적 핵보유국가로 한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분류돼 있다. 그래도 이번 사고는 일본을 새삼 다시 보게 만든다. 도대체 얼마나 플루토늄을 쌓아 놓고 있길래 발전용으로까지 쓰는 걸까?

미국은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핵무기 개발용’이라는 비난을 대놓고 한다. 북한이나 이란이 대표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나라 ‘원전’이라고 다를까? 핵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이라 부르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 부르든 핵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핵폭탄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즉 핵폭탄과 원리가 같다. 다만 핵분열로 얻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를 가능한 한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핵발전이고 이 때문에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파리를 잡자고 도끼를 아주 살살 휘두르느’ 것이랄까? 이 때문에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류에 대한 도끼로 돌변한다.

인류에 대한 도끼

각국의 정부는 핵발전과 핵폭탄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와 히로시마 핵폭탄 중 어느 쪽이 방사선 낙진이 많았을까? 핵폭탄이 더 클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체르노빌이 히로시마보다 2백~4백 배나 더 많은 방사능을 공기 중에 배출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보면, 체르노빌 사고로 최소 4천 명이 사망하고 그 외에도 4천 명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 주로 어린이들이다. 체르노빌 지역 주변의 어린이들이 음식물과 우유 그리고 물을 통해 방사능 요오드를 먹었기 때문이다.

피해는 체르노빌 주변 지역만이 아니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슘137, 요오드131 같은 방사선 낙진이 유럽 전체에 퍼졌다. 유럽도 편서풍이 불지만 체르노빌로 인한 세슘137의 분포를 보면 체르노빌 서쪽으로도 스웨덴,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천5백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게 지 번졌다.

체르노빌 사건 다음해인 1987년에 서베를린의 다운증후군이 1.5배로 늘었다. 터키의 부르사 지역에서도 다음해에 신경계통 기형이 증가했고 이 중 가장 심한 기형인 무뇌증이 다섯 배 증가했다. 2004년 스웨덴의 한 학자가 국제역학(질병통계학)저널이라는 권위있는 의학저널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1999년 즉 체르노빌 사고 13년 후, 스웨덴의 일부 지역에서는 체르노빌의 세슘 137 낙진 때문에 암 발생률이 20퍼센트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슘 137의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에 피폭된다는 것은 방사능 물질이 몸속에서 계속 분열을 한다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몸속에서 작은 핵폭탄이 계속 터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폭이다. 세슘이 30년 동안 반으로 줄 때까지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장기와 세포를 파괴한다. 그 다음 30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줄 때까지 몸 안에서 핵분열을 한다. 이 때문에 백혈병, 폐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5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 행사 안내물에는 작은 은박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학을 접기 위한 것이라 했다.

사기 사다코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녀였다. 엄마 말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였고 학교 이어달리기 팀에 들어 매우 좋아하던 아이였다. 그런 사다코가 1955년 어느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해 2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히로시마에서 두 살 때 피폭된 히바쿠사(피폭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다코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천 마리의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믿고 열심히 학을 접었다. 그러나 사다코는 천 마리의 학을 채 다 접지 못하고 그해 10월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사다코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종이학이 놓여 있다. 이것이 히로시마 원폭 추모식 행사 참석자들에게 추도식 종이학을 접는 작은 은박지를 나눠 준 이유다.

지금 일본의 부모들은 다시 55년 전 히로시마



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수돗물조차 마음대로 먹일 수가 없다. 비오는 날에는 학교를 보내기가 두렵다. 먹는 물은 생수로 먹인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요오드는 상처난 피부로도 들어간다는데 아이들 세수나 목욕도 생수로 시켜야 할 것인가.

천 마리의 학

한국은 어떤가. 지금 정부는 일본의 한국이 핵발전소 사고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농축산물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미루고 있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는 해류가 흐르고 또 오스트리아 연구소(ZAMG) 등에 의하면 방사선 낙진은 동쪽으로는 이미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갔고 남서쪽으로는 오키나와 부근까지 번졌다. 원양에서 잡아온 수산물은 안전할까. 이제 모든 수산물에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할 판이다. 당장 후쿠시마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사고는 주변국 나아가 전체 인류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핵발전소만 유독 안전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도 지진 단층대 위에 핵발전소가 있고 일본 서쪽 지진으로 동해안에 쓰나미 위험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핵 재앙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 핵발전 사고가 나면 그때는 황사도 방사능도 이번만은 서쪽으로 가라고 기도하자고 할 것인가? 핵발전 역사 50년 동안 이미 세 번째 재앙적 사고다. 이제 더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핵 없는 세상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다. 지금부터 핵발전소 전체를 폐기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일본의 부모들이나 일본산 수산물을 사지 않는 한국의 부모들의 절박한 걱정은 핵 없는 세상이 오기 전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들, 그리고 삼촌과 이모들이 이제 ‘핵 없는 세상’을 외쳐야 한다.

히로시마에 살던 사사키 사다코는 6백44개의 학만 접고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같은 반 어린이들이 나머지 학을 접어 1천 마리의 학을 그녀와 함께 묻었다고 한다. 오늘 여전한 핵 공포의 시대에 인류를 위한 나머지 학은 누가 접을 것인가. 바로 당신과 나다.

레닌까지 곡해하며 민주당 뒤통무니 쫓는 진중권

진중권이 거둬해서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계급연합을 옹호하고 있다. 급진좌파에 적대적이면서 갈수록 민주당·참여당과 가까워지고 있는 진중권은 최근 김규향의 “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좌파” 딱지를 허락받고 써야 한다면 차라리 반납하자”며 신경질을 낸 바 있다.

진중권은 3월 22일 〈한겨레〉칼럼에서도 다시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식 ‘사회국’의 이념 아래 서민복지와 남북화해를 추구한다는 최저 강령에는 세 주체가 모두 동의”할 거라는 것이다.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처럼 친자본주의 정당인 참여당까지 포괄하며 진보의 강령을 후퇴시키는 연합을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규향의 말마따나 “양식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진중권은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포함하는 “선거대연합”을 “유권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절대시한다. 이명박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참여당이 아닌 진보 대안을 바라는 사람들은 없는 양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까지 한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협박에 맞서 선거 때마다 꽃잎이 독자 출마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도 까먹은 듯하다.

나아가 진중권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주장까지 곡해한다.

“반엠편 전선은 부르주아만 이롭게 한다[는] ... 대책 없이 털 여문 좌파들에게는 원조 빨갱이의 말을 들려주자. ‘프롤레타리아는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레닌)”

올머 겨자 먹기

물론 레닌은 노동계급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일반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권이 노동계급의 투쟁에도 특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자유민주적 권리를 지지했던 것이지,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 레닌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뺏속 깊이 불신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위 때문에 부르조아지는 민주주의 혁명에서 반드시 일관성이 없[고] ... 민주주의적 진보를 두려워하여 뒷걸음질 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더라도 매우 소심하고 불철저하고 올머 겨자 먹기 식으로 투쟁한다.” 김대중·노무현이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반이명박 투쟁에서 거듭 머뭇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레닌은 자유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마저도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도 통렬하게 폭로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항상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위선적인 가짜 민주주의이고, 무자에게는 천국이지만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정이고 속임수다.”

레닌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고 실제로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진중권은 레닌까지 곡해하며 민주당 뒤통무니 쫓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진보와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연합을 위해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참여당을 진보로 포장하면서 비판을 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반이명박 투쟁에서 진보의 손발을 묶는 것이며 그라선 ‘일반민주주의’조차 이루기 어렵다. 전북버스 파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결사의 자유조차 공격하는 민주당과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보라.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맞서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면서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진보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전지윤

전국학생행진 비판

법인화 반대 투쟁을 회피하려는 태도

전국학생행진(이하 학생행진)이 얼마 전 “법인화” 법을 폐기하는 투쟁은 한계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8호 ‘서울대 법인화법 반대 투쟁을 바라보며’) 학생행진은 이 글에서 대학 기업화의 상징인 법인화 반대 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행진 경향 활동가들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주도하고 있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를 위해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학생행진은 이미 대학이 기업화된 상황에서 법인화 법 폐기는 “결과에 대한 투쟁”에 머무를 뿐,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적”이라고 말한다. 법인화 반대 투쟁 속에서 법인화 법안을 폐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반대 선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선전에 머물러선 안 되고 실제 법인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법인화 법을 폐기시켜야 할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법인 폐기 투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서울대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총학생회가 법인화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듯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월 24일 학내 집회 이후에는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분명히 하지 않고, 법인화 폐기를 위한 집회 참가와 공동전선을 조직하는 태도 소극적이다.

물론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좌파 활동가라면 끈질기게 투쟁을 조직하며 학생들의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구호?

그런데 학생행진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교육 공간조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 공공성” 요구도 이제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맞게끔 쓸모있는 인문학이 되기 위해 학문을 변형시켜 주길” 원하기 때문에 “기초학문 사수”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구호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김예슬 선언’에 많은 학생들이 크게 공감한 것에서 보듯, 대학 시장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비록 극심한

경쟁 압력에 휘말리고 있더라도 말이다.

서울대에서도 2009년 9월 실시한 서울대 학생 총투표에서 80퍼센트 이상이 법인화를 반대했다.

물론 여론이 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승리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려 노력하면서 끈질기게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대학 기업화가 더 확대되느냐 마느냐는 운동진영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6~2007년 그리스에서는 대학을 사유화하는 법에 맞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웠고, 정부의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정부는 저항에 밀려 국립대 법인화를 10년 넘게 추진하지 못했다.

‘원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므로 한계적’이라며 투쟁 건설 과제를 회피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런 식이면 이집트 혁명도 자본주의라는 원인이 아니라 무바라크 정권이라는 결과에 맞서서 한계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과에 맞선 투쟁’이 전진하고 승리할수록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도 앞당겨질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좌파 활동가라면 투쟁 건설 과제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선영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핵은 재앙이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이번 일본 사고로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사고 전에도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등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이명박 정부와 세계 각국 지배자들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고 이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이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며,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화는 순전히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기반한 것이다.

핵발전은 안전한가?

핵발전은 핵분열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핵발전은 “체인이 달린 톱으로 버터 1파운드를 자르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아무리 2중 3중으로 안전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기계적 오류와 인간의 실수, 지진·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 무시무시한 사고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핵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감기가 수백 년에서 수만 년이나 되고 그 중 일부는 50만 년간 방사능을 띠는데, 세계 어느 국가도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만 년은 고사하고, 수백 년 뒤 후손들에게 ‘이곳을 절대로 파헤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핵폐기물 매립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들은 수백 년 안에 부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의 핵폐기물들이 지하수와 만난다면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큰 피해를 낳을 것이다.

핵발전이 친환경적인가?

핵발전 지지자들은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핵발전이 우라늄 광석을 채굴해 부수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거대한 발전소를 짓고, 방사능을 가진 핵폐기물을 격리해 저장하는 등의 과



핵은 비싸고 환경경적이며 위험한 군사 무기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우라늄 농도가 풍부한 고등급 원석을 이용하는 지금도 핵발전은 풍력발전보다 이산화탄소를 50퍼센트 더 배출한다고 추정된다.

게다가 세계 각국 정부가 핵발전소를 대폭 늘리거나 혹은 앞으로 핵발전이 계속돼 저농도의 우라늄 원석까지 사용하는 시기가 된다면, 핵발전은 화력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것이다.《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4쪽

핵발전은 값이 싼가?

핵발전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존 핵발전소의 운영비만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핵발전소 건설·유지·폐쇄 등의 비용과 환경 파괴에 대한 보상비 등을 누락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강원도 삼척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3조 5천억 원

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 세금 지출은 핵발전 비용에 잡히지 않는다.

핵발전 산업의 비밀주의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들이 받은 정부 지원금(핵발전소 건설 비용 지원, 세액 공제, 대출 보증, 연구지원비, 사고 보험비 등)은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조차 “일반적으로 핵발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으며 폐기물 처리와 폐쇄에 드는 비용, 그리고 다른 환경 비용들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핵발전과 핵무기

이번 일본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일본에 핵발전소가 왜 이리 많은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일본처럼 재해가 빈번한 나라에서 핵발전소를 50기 넘게 지

은 것은 분명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온갖 어려움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발전소 건설에 뛰어드는 진정한 목적은 핵무기 보유다.

핵발전소의 탄생 자체가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이었다. 여기에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그럴듯한 위장막이 쳐졌지만 말이다.

미국이 북한·이란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 우라늄 농축 계획 등을 핵무기 개발 계획이라며 반대해 왔다는 사실은 핵발전과 핵무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지 잘 보여 준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에도 반대해야 한다. 굶주리는 인민을 위해 쓰기에도 부족한 재원을 이런 데 쏟아붓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나 핵발전과 핵무기의 연계는 북한·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만의 일은 아니다.

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수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다함께 등이 발의해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참가자들은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수출 중단

김대중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몰래 핵무기 관련 실험을 하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서 ‘핵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에서도 이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나?

핵발전 지지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핵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발전보다 분명히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태양열·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그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가격 면에서도 기존의 화석연료나 핵과 비슷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생산단가는 이미 석탄이나 석유의 발전 단가에 근접한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아직 발전 단가가 비싸지만, 계속 기술을 혁신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 비용을 80퍼센트 가량 낮출 수 있었고, 더욱 낮아지리라 예상된다.

게다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 전동기, 각종 산업공정 등에서 이미 개발돼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만 도입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수요의 30퍼센트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대도시에 24시간 무료 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자전거 등과의 연계를 확대한다면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석유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지적처럼 “후쿠시마 원전 재앙이 주는 교훈은 단 하나뿐이다. 이미 술한 핵실험과 원전 사고로 심히 오염된 생태계를 현 상태나마 지키려면 당장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움켜쥐고 결코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지배자들에 맞서 아래로부터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할 때 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강동훈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는 반핵 시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시작된 지난 3월 12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6만 명이 반핵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네카베스트하임 핵발전소 주위 45킬로미터를 둘러싸는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독일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조치에 항의해 벌인 이 시위의 성과로 메르켈은 수명 연장 정책을 철회하고 노후

한 핵발전소 일곱 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4일에는 뉘셀도르프에서도 수백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렸고 16일에는 쾰른에서도 반핵 시위가 열렸다.

전체 전력의 70퍼센트를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13일 수백 명이 참가하는 반핵 시위가 열렸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반핵 시위가 열렸다.

핵발전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지배자들도 이런 반핵 운동이 미국으로 확산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당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였던 피터 브래드포드는 “미국 내에서 원전 거부 움직임

하라”하는 구호를 외쳤다.

핵발전소 유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의 지역 단체들도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기후정의연대(준)는 3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반핵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장호중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